



3면

김관영 도지사 시군 방문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음 1월 10일)

제36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젊은 전주, 희망의 도시로 나아간다

전주시, 청년 정책 강화

전주시가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 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해 '젊은 전주,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청년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대의 보호와 지원은 미래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자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라며 "청년이 곧 전주의 미래"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별처럼 빛나는 전주 청년들의 희망과 성장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를 위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확 줄여줄 전주 청년만 원주택 '청춘★별채'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기존 시세의 40% 수준을 내고 이용했던 청년 매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해부터 1만원으로 줄인 '청춘★별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총 82호(상반기 70호, 하반기 12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원룸·투룸·스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1만원~3만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방 1개당 민간주택 월 평균 임대료(43만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1만 원의 임대료가 산정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 형태에 따라 적게는 9만원~28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청년들의 임대료 납부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증금은 50만원이다.

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원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시는 오는 2월 중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오는 2028년까지 이러한 주택을 총 210호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청춘★별채는 이용 편의를 위해 대학교 근처 등 청년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공급되며, 세대별로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이 설치돼 입주 때 겪을 수 있는 이사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는 앞으로 늘려갈 청춘별채에 대해서는 새로 지은 주택 위주로 공급해 청년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



우범기 전주시장은 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청년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시세 4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호별 1만원으로 인하

“극소수 청년만이 수혜입어 로또 당첨과 같다” 우려도

청년 지역 정착 수당·자립 준비 청년 정착 지원도 추진

공기로 했다.

또한 시는 '청춘★별채'와는 별개로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70호를 함께 공급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청년 1,700여명에게는 최대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고, 신혼부부 등에게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전주를 떠난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취업 준비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 활력 수당을 제공해 구직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연 1회 10만 원 이내의 여학 시험료 지원 △교통비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기존 사업들도 지속 추진된다.

동시에 시는 1,300여명 청년에게 지역 정착 수당을 지원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150명에게는 1,0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임대하는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마음이 다

친 청년을 돌보기 위한 청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도 추진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원동력인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며 미래세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젊은 전주,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와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삶의 터전, 청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쌓아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청년들이 돌아오고 찾아와 새로운 전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1만원 임대료 사업”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의회 도시건설위에 지난해 10월 경에 건의를 했었고 따로 시민 공청회 등은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1만 원 임대료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 중 몇몇 곳에서 시행 중이고 아직 4~5년 밖에 되지 않아 검증된 바 없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1만원 임대료 사업'과 관련, 극히 적은 청년층만이 수혜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로또 당첨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 여론도 상존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대왕고래 1차 탐사시추 실패

정부 “경제성 확보 수준 아냐”

지난해 12월 20일 시작한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가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는 1차 탐사를 통해 사전 예측보다는 양호한 석유시스템을 확인했지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의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1차 시추를 통해 양질의 저류층, 두꺼운 덮개암, 셰일층을 확인했지만 탄화수소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 판단은 가스 포화도를 비롯해 저류층, 덮개암 등이 충분했는지 탄화수소 등을 본다”며 “대왕고래를 생산 광구로 전환할만한 가스 포화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가스가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 수 있고 균열을 통해서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있는 가스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전북교육청, 도단위 교육청 중 ‘최고 등급’

민원제도 개선 노력 등에서 우수 평가 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도단위 교육청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나' 등급을 받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처리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5개 항목, 17개 지표를 정량·정성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나' 등급은 평가 시행 이후 달성한 최고 등급으로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전북교육청은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 및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행정 관리조직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등 4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민원제도 개선 노력,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속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자민원신청시스템 확대, 민원인 편의 증진 서비스 강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독자 광역권’ 됐다

국토부서 분류… 전북자치도, 국가계획 수립·반영 ‘탄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전북을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분류해 국토 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전북자치도의 각종 국가계획 수립 및 반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 이를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때,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는 다르게, 별도의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를 독자 광역권으로 설정한 이유는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독자 광역권 설정은,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작년부터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내

용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 건의와 동시에, 양당 원내 대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한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독자적 지위를 바탕으로 각종 도로·철도 교통·SOC 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등 국가 기간망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이를 대광법 개정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전북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개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